

국제적 분쟁 지역에 대한 대여, 양도, 수출 등 군사 지원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발의

1 **현행, 국방부 「군수품관리법」에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 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하고, 「방위사업법」에는 수출 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화**

- 지난,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‘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’을 시사한 바, 다각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국민적 동의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적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외교적·국제적 갈등 등을 차단하고자,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군사지원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공언하였습니다.
- 이에,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국방위 김병주 의원(비례대표, 前 육군 대장)과 함께 「군수품관리법」과 「방위사업법」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
- 현행법상 분쟁 지역에 대한 전투 장비나 탄약의 대여·양도·수출에 대하여, 국회 동의권이 없기에 정부가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탄약을 제공하고, 대리 관계 등 국제적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이 위협받아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- 따라서, 이번 「군수품관리법」 일부개정안에는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대여·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하고, 「방위사업법」 일부개정안에는 수출 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. 이 개정안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(AECA) 등을 감안할 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것입니다.
- 이는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·양도에 대한 승인권 및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 승인권을 보장하면서 국회의 동의권을 추가한 입법이며,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에 따른

군사지원 제공 시에는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해 급박한 상황에도 대비하도록 우회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.

-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“분쟁 지역에 전투 장비와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” 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.
-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적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2023. 04. 27.(목)



번호	법안명	주요내용	비고
1	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안 (김병주 외 29인)	◦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 대여·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 명시	국방위
2	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(김병주 외 29인)	◦ 수출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 명시	